



“생애 첫 투표 꼭 하세요” 7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도서관 앞에서 대학생들이 ‘생애 첫 투표인단 2012명’ 모집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 YMCA 세상을 바꾸자 운동본부’ 주최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 경선, 동원경쟁 악몽 또...

광주·전남 선거인단 절반이상 현장투표
일부 후보들 벌써부터 조직동원 움직임
선관위 “차량 제공도 선거법 위반” 감시

4·11 총선 민주통합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이 선거인단 모집에 이어 또 한 번의 조직동원 경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모바일투표 보다 현장투표 신청자가 훨씬 많은데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투표소가 많지 않고 거리가 먼 탓에 조직을 이용한 불법 동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당내 경선에 차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현장투표 당일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4·5면〉
7일 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광주 5곳의 경선지역의 경우 오는 10~11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를 거쳐 12일

현장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전남지역 8곳 경선지역은 12~13일 모바일 투표를 시행하고 14일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이번 경선에는 광주에서 10만9529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며, 이 가운데 51%인 5만5877명이 현장투표를 하게 된다. 전남은 선거인단 17만2432명 중 56%인 9만6759명이 현장투표를 신청했다.
이처럼 선거인단 50% 이상이 현장투표를 하게 됨에 따라 광주 북구 갑, 광산 갑, 나주·화순, 무안·신안 등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일부 경선지역의 경우 현장 투표결과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후보 측은 현장 투표에

선거인단을 얼마나 많이 동원하느냐가 이번 경선의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경선 후보들은 벌써부터 선거운동원을 중심으로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실어나를 ‘비밀작전’을 짜는 등 동원 계획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투표 선거인단 대부분이 60대 이상 노인층인 전남의 경우 투표소까지 거리도 먼데다 노년층이 많아 차량 편의 제공 등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주통합당이 ‘공천 혁명’으로 내세웠던 ‘모바일 국민경선’이 선거인단 모집과정에서 조직·관공·동원선거로 얼룩진 데 이어 현장투표 역시 불법 동원선거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높다.
전남 모 선거구 경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농촌 선거구인 만큼 차량 편의 제공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인단 현장투표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고, 선거인단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경선 후보들은 조직동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육관 경선 보다 못한 경선방법이 됐다”며 “체육관 경선은 현장에서 후보자의 정책을 들어보고 홍보물이라도 살펴볼 수 있지만, 이번 현장투표는 단순히 투표만을 위한 것이어서 정책과 자질 보다는 조직과 관련된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선관위는 민주통합당 현장투표에 금권·조직을 동원한 불법 경선이 우려됨에 따라 현장 투표소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日 대지진 1년-작년 동일본 대친 쓰나미 한국서 발생하면 광주·전남 32% 물에 잠긴다

만약 지난해 3월 일본을 대친 최고 37m의 쓰나미가 광주·전남지역을 강타한다면, 여의도 면적의 868배(3,910km)의 땅이 물에 잠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이는 광주·전남 총 면적(12,748km) 중 32%를 차지하는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는 뜻이다.
또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구온난화현상이 이어진다면 오는 2100년에는 0.59m의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7일 “최근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라 만들어진 ‘해수면상승시뮬레이터’를 작성한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5일 공개된 해수면상승시뮬레이터는 UN 산하 IPCC(기후변화위원회)의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국내 침수 현황을 알기

■ 쓰나미 공습시 침수 예상지역

또 한반도 평균 해수면 높이가 0.59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2100년에는 광주·전남지역은 여의도 면적 5배(23km)가 물에 잠기고, 전국적으로는 국토 중 49%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밖에 해수면이 0.32m 상승하는 2050년에는 광주·전남지역의 11km가 물에 잠기고, 그린란드의 빙하가 완전히 녹아 해수면이 7m 높아지면 이 지역은 396km이 침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내 해안에서 지난해 일본처럼 대형 쓰나미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며, 지금처럼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 해수면이 상승한다면 벌어질 수 있는 재앙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든 자료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무안공항 경유 신설안 나오나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노선 막판 협의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구간 노선을 결정하게 될 철도산업위원회 회의가 앞두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남도와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은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7일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가 전남 전남도청을 방문해 박준영 도지사 등과 면담을 갖고, 현장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도는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전달했고,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남~제주간 고속철 해저터널 사업 타당성 조사가 나올 때까지 모든 결정을 미루자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장·차관 등 20명으로 구성된 철도산업위원회가 최근 새로운 위원 인선을 모두 마치고, 전남도의 해저터널

용역도 3월 말에 마무리돼 조만간 철도산업위원회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남도의 절충안을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가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구간 노선 결정의 새로운 변수가 됐다.
지난해 시작된 이 구간 노선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기존 철도 활용 방안에 대해 전남도는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신설 노선을 요구하고 있고, 나주 주민들은 나주 경유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오늘 타결 야권연대 협상...“경선” “무공천” 막바지 진통

8일로 예정된 야권연대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7일 민주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야권연대 협상은 3~4개 지역구 문제만 해결하면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서울 은평

울(천호선), 노원 병(노화찬)과 경기 고양시 덕양 갑(심상정)에 과주 울과 의정부 을 등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등 3~4개 지역구를 추가로 양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광주 서 울과 순천·곡성, 관악 을, 수원 장안, 울산 북구, 부산 영도 등에서 민주

통합당의 무공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서 울과 순천·곡성 지역구의 야권연대와 관련,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끝까지 관철시킬지는 미지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드리는 마케팅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www.aliotv.kr

光州日報의 알리는 aLIOTV

기업의 3대 애로사항은 자금, 판로, 사람입니다.
한·중 비즈니스센터를 통하여
One Stop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 판로** 기업 홍보 및 마케팅 대행을 통한 판로 확대
- 자금** 정책자금 및 각종 투자유치 컨설팅 수행
- 사람** Global Market 진출을 위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사업

호남 기업의 중국 진출 지방자치단체 중국홍보 한·중 비즈니스센터 알리오TV가 책임지겠습니다.

- 중국내 자매 홍보매체

CNTN 중국국제전신망 http://nr.cntn.cn
CNTN 한국어방송 http://www.cntn.cn
www.dbw.cn

특종상선문 www.hjxinwen.cn

ADEC 광주일보 자회사 (주)아데크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5층 TEL. 062-223-5111 FAX. 234-5113
서울사무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89년치 운영빌딩 701호 TEL. 02-756-6733 FAX. 2179-7982